

2014

연구보고서-11

I S S U E P A P E R

여성정치교육 주체별 콘텐츠 차별화 및 전문화, 프로그램 상설화 도모 방안


수행과제명 • 여성정치인 육성 지원 방안 연구-기초의회를 중심으로-
과제책임자 • 김원홍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여성정치교육 주체별 콘텐츠 차별화 및 전문화, 프로그램 상설화 도모 방안*

수행 과제명  여성정치인 육성 지원 방안 연구-기초의회를 중심으로

과제책임자  김원홍 연구위원

 Tel: 02-3156-7101

 e-mail: kwh56@kwdimail.re.kr

요약

본 연구는 여성의 정치영역 진입시 장벽이 가장 낮았던 기초의회에의 여성정치인의 수적 확대뿐만 아니라 전문화·체계적인 그리고 지역 맞춤형·생활밀착형 교육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이수한 여성정치인들의 역량이 기초의회에 의정활동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양질의 경험 축적을 가져옴으로써, 이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의 선순환적 사이클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 마련을 모색함.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김원홍·김혜영·김민정(2014). 여성정치인 육성 지원 방안 연구-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배경 및 문제점

- 본 연구는 여성 정치인의 인적 자질의 향상이 선거에서의 승리와 향후 의원으로서의 경력 지속 및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현재 정당이나 여성단체에서 진행중인 여성정치인 육성 지원 방안의 한계로 지적된 일회성, 이벤트성, 단기성, 간헐성, 비차별적 커리큘럼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에 주목함.
- 특히 우리의 여성정치교육에 대한 문제로는 여성정치 교육에 대한 재정이 열악하다는 점과 공적 국가기관이 여성정치교육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음.
 -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온 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그들은 주요 정당들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단체, 지역의 여성정책 연구기관과 부분적으로 대학 등에서 여성정치교육을 유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음.
 - 한국의 경우 각 주체별로 정당은 여성당원을 대상으로 여성정치지도자 교육을, 여성단체들은 단체 소속 여성을 대상으로 유권자 교육 및 리더십 교육 등을, 대학에서는 여성리더십 교육을, 선거연수원은 여성단체 임원 및 학생간부를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 및 리더십 교육을,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서는 리더십 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을 단기적, 비지속적, 불규칙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음.
- 국가는 실질적인 양성평등과 여성의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가 여성정치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정치교육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여성정치교육 과정에 대한 현황 고찰과 함께 적극적인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정치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을 체계화하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유권자 교육, 여성정치참여 확대 및 정치지도자 발굴 교육, 양성교육 등으로 세분화하여 범주를 나눌 수 있음. 실제, 유

권자 교육으로는 유권자로서 기본적 민주시민 교육과 생활정치 교육을, 여성정치참여 확대 및 정치지도자 발굴 교육에서는 여성 리더십 교육을 하고, 또 심화과정인 정치지도자 발굴 및 양성 교육을 통해서 여성정치인을 배출하는 과정으로 교육과정을 세분화하는 것임.

- 세분화된 교육과정에 맞춰서 교육기관도 역할분담을 해서 유권자로서의 기본적인 민주시민 교육 및 생활정치 교육은 공교육기관에서, 여성단체는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리더십 교육을, 정당은 당원과 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교육과 함께 여성정치인 발굴 및 육성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 정치영역에의 진입의 가장 초보적인 관문이자 여성들에 대한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영역인데다, 지방자치의 성격을 생활정치라고 규정할 수 있고 이에 여성친화적 영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 부문에 진출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수적 증대 및 질적 향상 도모가 이후의 전체적인 정치영역에서의 여성 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는 점에 그 중요성을 인식함.
- 이와 관련하여 여성정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정당, 여성단체에서 해야 할 역할을 중심으로 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조사 및 분석결과

- 제6회 지방선거 대비 2011-2014년 정당과 여성단체의 여성정치인 육성 및 지원 관련 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우선 일회성 면피용 행사 프로그램의 성격은 벗어나고자 노력중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포착할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단기성, 비상설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역시 포착할 수 있음.

- 정당의 여성 정치인 역량강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시도당에서 행해지고 있음.
- 몇몇 시도당을 제외하고 양당의 시도당의 교육프로그램의 명칭을 보면, 동일 명칭에 몇 회차 등이 붙어 있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양 정당이 그간 꾸준히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온 연혁을 보여줌.
- 그러나 이들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은 여전히 상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 어느 시도당은 매년 개최하는가 하면, 다른 시도당은 한 해를 건너뛰기도 하거나 한 해에 여러 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함.
- 이는 교육 참가자가 선거에 대비해서 그리고 정치영역에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준비를 미리 예상하고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 없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이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의 비상설화는 교육공간의 확보와 예산 확보의 부족 등에서 오는 문제로 볼 수 있음.

〈양 정당의 여성 정치인 역량 강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일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프로그램	목적 / 성격	프로그램	목적 / 성격
새누리여성파워 네트워크 (중앙당)	공직선거에 출마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정치인의 발굴 및 육성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	전국여성위원회 공모사업	매년 새로운 여성정치문화 조성 과 지역 시민사회조직과의 교류활성화 사업 및 대주민사업을 통해 당 이미지 제고와 당 조직 외연 확대를 위한 공모사업을 진행
여성정치아카데미 (시도당)		여성정치아카데미 (시도당)	수료자 중에서 자치단체장, 광역 또는 기초의회 선거 출마자를 위한 별도의 '맞춤식'교육을 통해 최소한 500명 이상의 여성 선거후보자를 발굴한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

- 한편, 여성단체들이 행하고 있는 정치교육 프로그램의 경우는 교육 개설기간이 단기적이라는 문제가 있음.
 - 의회 인턴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주일 전후의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있는 실정임.
 - 해외지방자치연수와 같은 프로그램은 특성상 단기적이지만 상설화된다는 전제 하에 효과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이러한 단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치참여를 희망하는 여성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인맥 형성이나 공고화에 그칠 우려가 있음.
 - 교육 내용의 심화가 아닌, 여성예비정치가들 혹은 여성정치가들의 친목도모회로의 기능이 강화되는 쪽으로 교육의 초점이 이동할 위험성을 안게 됨.
 - 이러한 단기 교육프로그램화의 현상은 예산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음.
- 현실적인 한계에 적응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다 보니 정당의 당원 교육을 제외하고는 정당 및 여성단체, 그리고 여성단체들 간의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 참여자들의 정치인식개선 및 역량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한계로 보임.
 - 이에 대해서는 정당관계자들과 여성단체 구성원 모두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이지만, 크게는 예산의 제약이라는 현실적 원인과 함께 정당의 경우 남성중심적 사고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쉽사리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물꼬를 키우기 어려워하고 있음.

“체계적이고 전문화하여 특성화하여 교육을 시켜야 한다. 여기저기서 중구난방 반복적인 교육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정치참여에서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전략 등 기술적인 것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교육을 상설프로그램으로 3개월이든 6개월 프로그램으로 국내 2-3개 단체에서 상설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금 때문에 이게 실현

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정치리더십만을 가르치는 여성정치전문교육기관을 하나 만들어보고 싶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여성정치기금을 설치해야 하고, 처음 시작하는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하는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한국여성단체협의회)

“어떤 때는 교육생에게 회비나 수강료를 받았다가, 어떤 때는 재정 지원을 받아 수강료를 안 받았기도 한다. 결국 재원이 불안정하니까 교육의 지속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한국여성정치연구소)

“개인적으로, 한국의 정당정치가 정착되든 안 되든 간에 여성들이 정치참여를 하려 했을 때 나름의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시민단체나 여성단체를 통한 정치인 발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정당 쪽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과 정치진출이 직접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미 작년의 경우에도, 여성예비정치인들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는데, 그들은 이미 양당의 어느 쪽에 교육 프로그램이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을 얻기 위해 여성단체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걸로 드러났다. 이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시작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단체도 어떤 성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성정치인 발굴이나 교육생 모집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한다. 이는 앞으로 계속 지속될 현상으로 보이고 있다. 여성단체가 분명히 해야 될 영역은 있다. 젠더적 성향을 가진, 여성주의적 성향을 가진 여성에 대한 이해와 여성의 성인지적 관점을 대변할 수 있는 여성들을 양성하고 발굴해서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여성정치인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당 자체가 여성 발굴 및 교육, 훈련 과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젠더정치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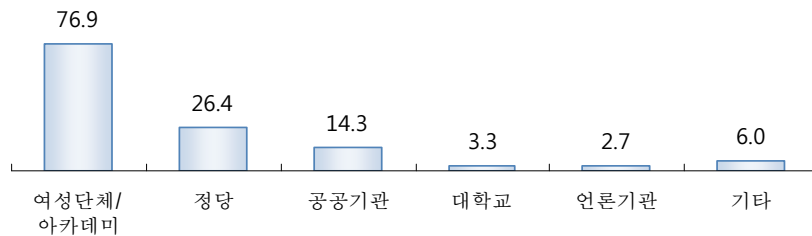
“상시프로그램, 가령 정치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상시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네트워크를 위한 교육 위주로 이루어져서 문제이고, 너무나 기능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이념이라든가 가치지향의 연속성을 갖지 못하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또한 단체별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상 차별성이 없으므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 강좌수도 들쭉날쭉하고, 교육의 절대적 양과 질에 있

어서도 일관적이지 못하다. 교육의 양과 질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지금의 아마추어리즘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새정치민주연합 여성국장)

●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여성(예비)정치인들 역시 이러한 점들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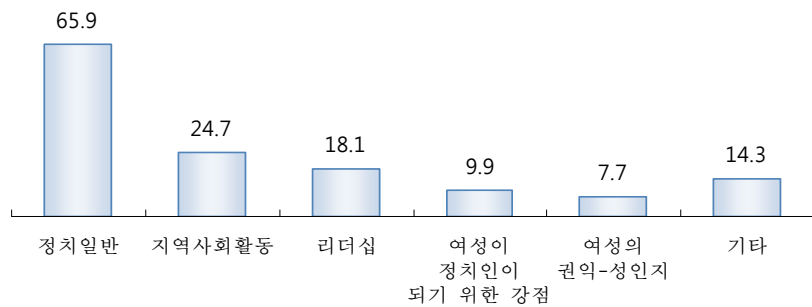
-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받은 여성정치인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의 종류 및 관련 기관은 다음과 같음.

(n=182 , 단위 : %)



[교육 받은 기관 (복수응답)]

(n=182 , 단위 : %)



[교육 내용(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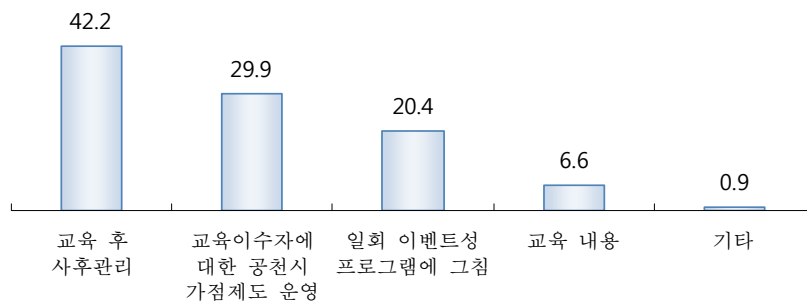
- 여성정치교육을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단위는 정당임. 정당은 자체적으로 신인을 발굴하고 신인이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정당 내 여성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임.
- 그러나 정당은 동시에 여성의 대표성 확보와 여성정치교육 확대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리더십 교육, 선거출마전략, 여성후보 발굴 작업 등 실제 정치에 참여할 예비 후보군 양성에 사실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정당에서 제공하는 여성정치인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조사응답자 비율은 65.3%이며, 선거 본선진출 경험이 많은 집단일수록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정당이 제공하는 훈련 및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조사응답자로부터 정당 제공 훈련 및 교육이 여성정치인 발굴과 육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여성정치인 발굴, 육성, 세력화에 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46.4%, 47.9%, 42.7%임.

〈정당 제공 훈련/교육 여성정치인 발굴/육성 도움 정도(그렇다+매우 그렇다)
- 본선출마경험〉

		사례수	여성정치인 발굴	여성정치인 육성	여성정치인 세력화
전 체		(211)	46.4	47.9	42.7
본선출 마경험	1회	(85)	50.6	45.9	38.8
	2회	(72)	36.1	41.7	44.4
	3회 이상	(39)	51.3	59.0	41.0
	없음	(15)	60.0	60.0	60.0

- 훈련 및 교육에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질문한, 정당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는 ‘교육 후 사후관리’를 꼽은 경우가 42.2%로 가장 많았고, 교육을 받은 62.6%는 교육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발굴과 육성이 관리되기를 희망함. 훈련 및 교육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 교육 정보가 전달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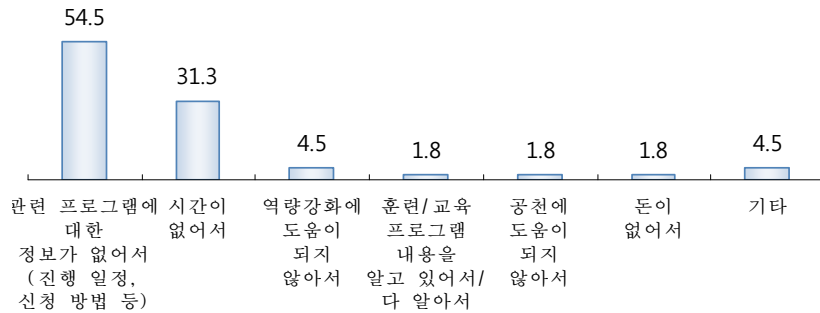
(n=211 , 단위 : %)



[정당 교육 프로그램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

- 또한 정당 제공 여성정치인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응답자에게 미참여의 이유를 질문한 경우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54.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시간이 없어서’(31.3%),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4.5%) 등의 순이었음. 프로그램의 상시화 및 정규화를 통해 훈련 및 교육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 교육 정보가 전달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 부분임.

(n=112 , 단위 : %)



[정당 제공 여성정치인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미참여 이유]

● 한편, 여성단체에서 제공하는 여성정치인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참여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이 56.3%로 나타남. 특히 이들을 출마 이전 직업별로 살펴보면, 정치관련, 운동/활동가, 자영업 직업군에서는 여성단체가 제공하는 여성정치인 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에 더 높은 접근성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이들 직업군에서는 출마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가 더욱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음.

〈여성단체 제공 여성정치인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 본선출마경험〉

		사례수	참여	비참여
전 체		(323)	56.3	43.7
본선 출마 경험	1회	(155)	49.7	50.3
	2회	(89)	68.5	31.5
	3회 이상	(45)	73.3	26.7
	없음	(34)	32.4	6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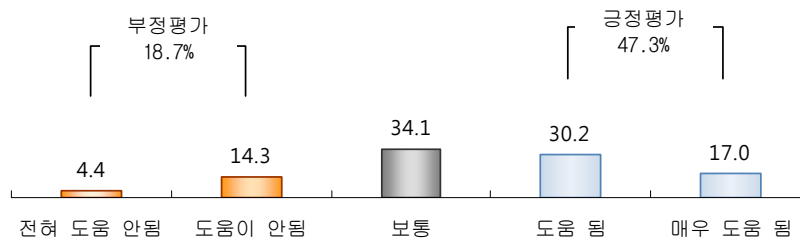
〈여성단체 제공 여성정치인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 출마이전직업〉

		사례수	참여	비참여
전 체		(323)	56.3	43.7
출마 이전 직업	정치관련	(124)	70.2	29.8
	관리/전문직	(62)	41.9	58.1
	운동/활동가	(15)	53.3	46.7
	사무종사자	(23)	47.8	52.2
	자영업	(39)	64.1	35.9
	주부	(32)	37.5	62.5
	기타	(28)	46.4	53.6

- 여성정치인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에 대해 47.3%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가 다소 약함. 이는 여성정치인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이 정치에 출마하여 당선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일회적 실적 또는 단체 회원에 대한 시혜를 넘어서는 훈련이 되어야 함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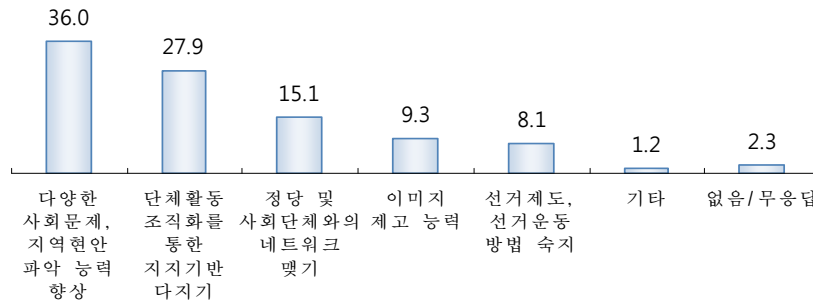
(전체 평균 : 3.41점)

(n=182 , 단위 : %)



[여성단체의 여성정치인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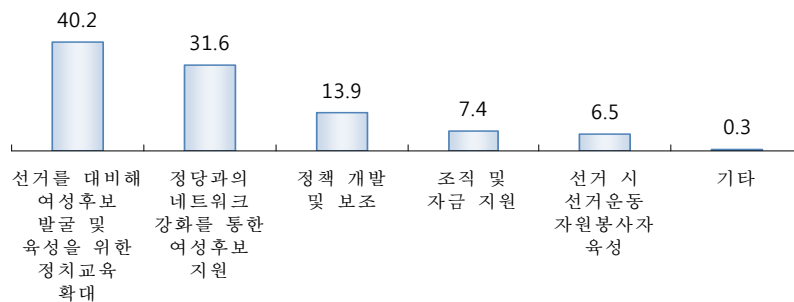
(n=86 , 단위 : %)



[여성단체 교육이 도움이 된 점]

● 여성정치인의 확대를 위해 여성단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거를 대비해 여성후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정치교육 확대’(40.2%)를 꼽았음. 그 다음으로 ‘정당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여성후보 지원’(31.6%), ‘정책 개발 및 보조’(13.9%) 순이었음. 모든 직업군에서 여성단체가 우선적으로 할 일에 대하여는 정치교육 확대에 가장 많은 응답률이 나타났고, 출마경험 횟수별로도 이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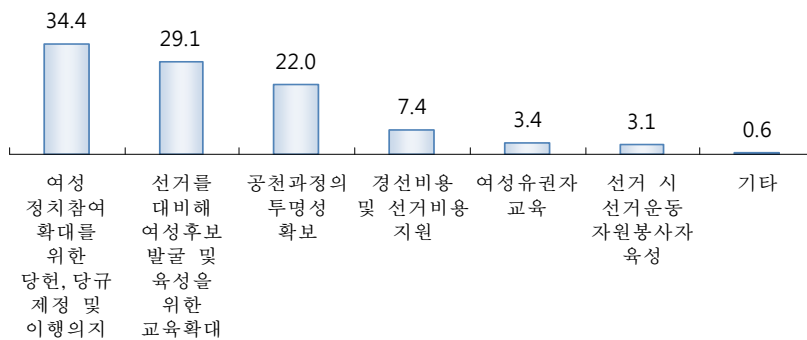
(n=323 , 단위 : %)



[여성정치인 확대를 위해 여성단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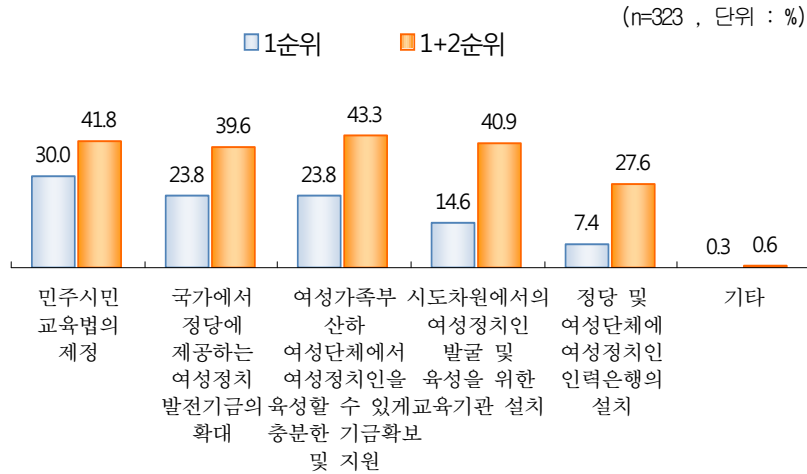
- 반면에 여성정치인의 확대를 위해 정당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당헌, 당규제정 및 이행의지’(34.4%)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선거를 대비해 여성후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확대’(29.1%), ‘공천과정의 투명성 확보’(22.0%) 순으로 응답함.

(n=323 , 단위 : %)



[여성정치인 확대를 위해 정당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 이는 여성정치인 육성을 위한 교육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 정당과 여성단체가 상이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정치영역으로의 진출과정에서 여성단체와 정당이 상이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여성(예비) 정치인들의 인식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여성정치인의 확대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1순위 기준)에도 교육 부문이 상위를 차지함.
 - ‘민주시민교육법 제정’(30.0%)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가에서 정당에 제공하는 여성정치 발전기금의 확대’(23.8%),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단체에서 여성정치인을 육성할 수 있게 충분한 기금확보 및 지원’(23.8%) 순으로 높게 나타남.



[여성정치인 확대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 2014년 6.4지방선거 당선자 4명 중 3명은 재출마 의향이 ‘있다’(78.5%)고 응답하였는데, 이들이 재출마를 위해 우선적으로 주력해야 할 활동으로 ‘지역 조직기반 구축’을 꼽은 경우가 68.8%로 압도적이었음.
- 이는 이들에 대한 정치교육이 일반교육 수준에 머무르거나 네트워크의 폐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되며, 실질적으로 여성정치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콘텐츠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3 정책제언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정당과 여성단체에서 실시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다음의 문제점들이 지적됨.
- 콘텐츠들이 대부분 비슷하다는 점
- 교육이수자에 대한 후속프로그램과 재교육이 없다는 점

- 교육방식이 주로 강의 위주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
 - 강의를 대부분 일반적인 이론이나 지식 위주로 이루어져 차별성이 없다는 점
- 반면에 몇몇 해외사례들은 다음을 시사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정치재단이 정치현장에 서툰 여성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론보다는 실용적 지식을 가르치고 또 직접 참여나 실습을 주요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할당제 등 제도적인 수단을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과 실시 주체의 필요와 정치이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정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영국은 전통적으로 정치와 교육을 분리된 영역으로 간주했었으나, 20세기 중반 이후, 영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정치교육의 제도화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따라 학교 시민교육 및 의회 정치/시민교육을 발전시킴. 특히, 여성정치교육과 관련 비제도권(제3섹터) 영역에서 The Fawcett Society와 같은 시민단체(NGO)들을 중심으로 여성 정치교육, 여성정치인 양성, 여성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 캠페인, 선거유세 활동 등을 전개해옴.
 - 이들 국가들과 더불어 프랑스와 스웨덴의 경우, 각 지역의 정치적 이슈 혹은 지역에 중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 선거법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또한 선거운동방법, 자신을 소개하기 등의 실질적인 강의를 들으면서 정치에 나갈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음.
- 따라서 앞의 실증조사 결과와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다음의 정책들을 제안하고자 함.

제안1) 여성정치발전비 활용 및 운영 방향 개선

- 2013년 1월-12월 각 당에 제공된 경상보조금 중 여성정치발전비로 사용된 비용은 총 38억 2천 9백만 원으로, 이 중 새누리당은 약 17억 6천만 원, 민주당은 15억 9천 9백만 원, 정의당의 경우 2억 4백만 원, 통합진보당의 경우 2억 3천만 원이었음.¹⁾
- 주요 정당들은 여성정치발전비의 용도를 교육훈련비와 여성조직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정당들은 인력 및 전문성의 한계로 인하여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교육만 실시하고 있고 여성정치발전비를 본래의 목적인 교육 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여성인력의 인건비와 경상비용으로 충당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정당들이 여성정치발전비를 인건비나 경상비로 사용하는 것은 당초 여성정치발전비의 설치 취지에 비해 다소 소극적인 행보임. 따라서 당초 여성정치발전비의 취지를 살려, 제대로 정당 내 여성정치인 육성 및 교육에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함.
- 여성정치발전비가 당초 설치되었을 당시의 이념을 살려 본래의 목적인 교육/연수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가 법을 개정하여 정당으로 하여금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고, 이후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제안2) 정부기관의 여성정치교육 예산편성 지원 및 네트워크 확대

- 여성인재 육성 및 성인지 교육과 관련하여 여성단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공모내지 지속사업과 관련하여 여성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여성단체 협력 사업은 여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으나 예산 규모가 작아 충분하게 여성정치단체를 포괄하기 어려운 상황

1) 자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자료

으로, 상시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확보를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임.

제안3) 시민정치교육법의 제정 및 시민정치교육원의 설립

- 2014년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현재 국회의원 중 여성의 비율은 15.7%, 고위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3.7%에 불과함(여성가족부, 2014).
- 여성의 시대가 왔다고 말하기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우리사회의 유리천정은 더욱 더 견고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 원인으로는 보통 여전히 우리 사회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치 문화나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그러한 한편, 그동안 정치를 남성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정치에 대해 무관심했던 점, 여성들 스스로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았던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음.
- 따라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여성 스스로도 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여성 정치교육이 활성화 되는 것 역시 중요함.
-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자주적인 판단능력과 또 정치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울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거연수원에서 시민 정치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1~2일의 단기 교육과정으로 지속적인 연계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 않은 한계점이 있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정치교육법²⁾을 제정하고, 시민

2) 시민정치교육법은 17대 국회 당시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입법 발의한 적이 있으나, 통과가 안 되고 임기 폐기된 적이 있음.

정치교육원 설립 및 예산을 확보하여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그 과정에서 시민교육의 내용을 30-50%는 여성과 여성관련 내용으로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 선관위 산하에 중앙 및 17개 선거연수원에 시민정치교육원을 설치하여 유권자 및 의정감시, 후보자, 선거참모, 차세대 여성 지도자를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다 선진화된 시민사회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임.

제안4) 정당 내 여성리더십 상시 교육장 및 상시 프로그램 운영

- 정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에 맞는 여성정치인을 교육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

-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이 낮은 일본에서조차 각 정당은 여성국을 중심으로 여성 지방의원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고, 통일지방선거 시에는 여성후보를 위한 정치학습회를 개최하고 있음.

-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소위 오세훈 정치개혁입법들이 진행되면서 지구당 폐지 및 정치자금법 개선과 함께 정치자금법상 당원교육에 숙식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당원교육을 하더라도 그 지역으로 가서 3천원 이내의 다과만 제공할 수 있고, 교통비도 지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정당들은 정치연수원을 폐지할 수밖에 없게 됨.

- 법상, 핵심당직자, 상근당직자가 아닌 당원 교육에 숙식이 본인 부담이어서, 교육에 있어서는 굉장히 후퇴하였고 교육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 예를 들어, 정당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돈이 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몇 시간 이내의 짧은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주소임.

- 각 정당은 현재 여성정치인을 위한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여성정치인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을 체계화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커리큘럼이 한국의 정치상황에 적합하지 못한 부분이 많고 대부분 초보적인 교육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주소임.
 - 현재 대부분의 정당들이 운영하는 여성리더십 프로그램은 선거에 임박하여 선거운동방법과 정책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포함하는데, 이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커리큘럼을 정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그리고 장기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설계가 매우 중요함. 콘텐츠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사람들을 견인할 수 있는 요소 및 효과가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화와 콘텐츠의 전문화를 추구해야 함.
- 또한 일회성 성격의 여성정치인 육성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난 다음 후속·보완 교육이 가능하도록, 후속관리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함.
- 후속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위해서도 정당 내 여성리더십 상시 교육장 및 상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제안5) 여성정치박람회 정기적 개최

- 여성단체들이 주관하고 정당과 각계각층의 여성정치인들이 연대하여 일주일 정도 여성정치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을 구상해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행사는 여성정치인이 그들의 활동을 알림으로써 정당과의 네트워크를 돈독하게 할뿐만 아니라, 동시에 향후 유권자와의 만남도 기대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2016년도 총선을 대비하여, 여성단체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 여성정치박람회를 위한 준비기획단을 만든다면, 2015년 상반기에 실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4 기대효과

- 그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정비 마련을 위한 논의에서나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여성의 공천 비율 확대를 주장하는 논의에서 찬반입장을 막론하고 항상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었던 점은 조직 및 경쟁력 있는 여성 정치인 및 후보자의 수적 부족 문제였음.
- 이에 본 연구는 생활정치의 기본적인 공간으로서 여성들의 정치적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³⁾ 기초의회에서 여성들의 수적 확대를 이루고 의정활동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양적 및 질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 선순환적 사이클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초의회로 진출하고자 하는 여성정치인의 수적 확대 및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육성 및 교육 분야에 집중하여 살펴봄.
- 향후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콘텐츠를 가진 교육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들의 상시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견고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여성정치인들이 기초의회에 진출함으로써 수적 확대 뿐만 아니라 좀 더 생활밀착적이면서도 전문화된 여성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그들의 의정활동 경험이 질적으로 축적됨에 따라, 이후 선순환적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로의 선순환적 사이클을 형성하리라 기대할 수 있음.
 -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및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의 과제와도 일치함.

3) 그간 지역구 여성후보 비율의 경우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7.0%(16명, 2008년 제18대의 경우 11.8%),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 11.5%(198명, 2006년의 경우 5.2%(107명), 2010년의 경우 8.6%(154명))이고, 기초의회 14.1%(757명, 2006년의 경우 4.9%(391명), 2010년의 경우 9.4%(552명))로 낮은 상황이었다. 6회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의회 8.2%(58명), 기초의회 14.6%(369명)이었다.

(부록)

〈설문조사 대상 및 방법〉

구분	내용
(1) 조사 대상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회 여성 출마자
(2) 조사 지역	전국
(3) 유효 표본	323 명
(4) 조사 방법	구조화된 웹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E-mail 조사
(5) 자료 처리 및 분석	각 항목별로 빈도분석, 교차분석 실시
(6) 조사 기간	2014. 7. 29 ~ 2014. 8. 3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전 체		사례수	비율
		323	100.0
연령	50대 미만	83	25.7
	50대	166	51.4
	60대 이상	74	22.9
최종학력	고졸 이하	64	19.8
	대재/대졸	148	45.8
	대학원 이상	111	34.4
가구소득	399만 원 이하	78	24.1
	400~599만 원 이하	121	37.5
	600만 원 이상	124	38.4
출마지역	서울	68	21.1
	인천/경기/강원	82	25.4
	대전/충청	44	13.6
	광주/전라	39	12.1
	대구/경북	51	15.8
	부산/울산/경남	39	12.1

전 체		사례수	비율
		323	100.0
당선여부	당선	200	61.9
	낙선	123	38.1
소속정당	새누리	218	67.5
	새정치	93	28.8
	기타	12	3.7
출마이전 직업	정치관련	124	38.4
	관리/전문직	62	19.2
	운동/활동가	15	4.6
	사무종사자	23	7.1
	자영업	39	12.1
	주부	32	9.9
	기타	28	8.7
본선출마 경험	1회	155	48.0
	2회	89	27.6
	3회 이상	45	13.9
	없음	34	10.5

주관부처 : 국회, 정당,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관계부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